

일본의 지정학과 아베의 대전략 : 해양세력 전략과의 부합여부*

김 태 중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arami43@naver.com)



국문요약

냉전기 요시다 노선의 목표인 경제 대국은 달성했지만, 탈냉전과 더불어, 시대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이후 국내정치적인 문제로 일본은 새로운 대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군력 강화라는 위협이 닥치면서 아베 총리는 새로운 대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아베의 대전략에 대해서 현실주의나 수정주의라고 주장하지만, 대전략의 목적인 일본의 강대국화는 역내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대전략의 성패 여부도 중요하다. 따라서 아베 대전략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요시다 노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정학이 일본에 제시한 해양세력 전략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베 대전략의 목적과 수단 그리고 방법들이 일본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에 적합한지 평가하고자 했다. 일본의 역사와 지정학은 해양세력 전략이 일본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베의 대전략은 일본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이루려는 방법과 수단이 해양세력 전략과 부합하지 않았다. 아베의 대전략은 방법으로는 정치권력을 집중하였고, 수단으로 아베노믹스와 민족주의는 대륙세력 전략에 가까웠다. 따라서 아베의 대전략은 지정학이 제시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기에 전략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아베의 대전략, 아베노믹스, 대전략, 지정학, 해양세력 전략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486)

I. 서론

아베 전 총리가 2022년 7월 8일 참의원 유세 중 불의의 사건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가장 오랜 기간(8년 9개월) 총리를 역임했을 뿐 아니라, 탈냉전 이후 일본이 직면한 도전들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대전략을 제시하였다. 플라자 합의(1985)와 탈냉전으로 일본이 직면하게 된 경기침체는 이미 ‘잃어버린 20년’이 되었고, 중국의 경제성장과 그에 기반한 해군력 강화는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도전이었다. 아베 총리는 요시다 노선이 이런 국내외적 도전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2006년과 2013년에 각각 ‘아름다운 나라로’와 ‘새로운 나라로’라는 이름으로 탈냉전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많은 연구는 아베의 대전략이 현실주의, 수정주의 혹은 민족주의라고 성격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략이라는 것은 국가 최상위 정책이기 때문에, 그 현실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아베의 대전략이 잘 만들어진 것인가? 즉 대전략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은 적절한가? 그리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행하여 목적을 달성했는가? 즉 대전략의 목적을 위한 수단들과 방법들이 적절한가? 특히 일본의 새로운 대전략의 성패는 한국뿐 아니라 인·태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베의 대전략의 내용과 이행과정에 관해서 연구하고, 아베 대전략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베의 대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섬나라인 일본의 지정학적 상황과 당면한 경제문제, 주변국들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응 태세, 그리고 전략문화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략의 목적인 강대국 일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경제전략인 아베노믹스, 외교·안보 전략, 전략문화 그리고 이런 수단들로 목적을 수행하려는 방법인 정치개혁을 통해서 전반적인 아베 대전략을 평가하고자 한다.

1. 기존연구

아베 총리는 2006년에 이어 2012년 재집권하고 다음 해인 2013년 대전략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대전략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혁명적인지 그리고 일본 정책의 전환점인지에

대해 리프와 닐슨-라이트 그리고 후지와라와 기타오카, 휴즈 그리고 매슬로, 박철휘와 같은 학자들 사이에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우선 리프(Adam Liff)는 일본 방위 태세의 기본 추세는 변화하는 지역적·세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체제의 개혁 그리고 점진적이면서도 지리적·실제적 작전 범위 확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아베 정권의 일본 안보 개혁의 역사적, 전략적, 국내정치적 맥락을 무시하는 단점이 있다(Liff 2015, 79-99).

닐슨-라이트(John Nilsson-Wright)와 후지와라(Kiichi Fujiwara)는 비록 아베가 역사 문제와 이념적 측면에서 이전 지도자들과 달리 극단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의 안보 정책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실용적이라고 주장한다(Nilsson-Wright, Fujiwara 2015). 그리고 기타오카(Shin'ichi Kitaoka)는 1기와 달리 2기 아베 정권이 더 적극적으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본이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기치로 2013년 국가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수립하였다고 평가하였다(Shin'ichi 2014).

반면 휴즈(Christopher Hughes)는 아베의 대전략이 일본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수정주의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일본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Hughes 2015, 4-5; Hughes 2017). 매슬로(Sebastian Maslow)도 아베가 새로 제안한 안보 체제와 적극적인 평화주의는 전후 체제의 제약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선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은 기존 평화주의 규범을 희석하는 것을 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Maslow 2015). 그리고 박철휘도 1955년 이후 '요시다 노선'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혁을 가하는 것이 아베 정치라고 주장하였다(박철휘 2021, 182-183).

이처럼 아베 대전략에 대한 평가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려는 실용주의와 현실주의, 그리고 전후 평화헌법 체제의 제약에서 탈피하려는 수정주의와 혁명적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베의 대전략이 민족주의, 수정주의, 실용주의, 현실주의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베의 대전략이 현 일본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Luttwak 2001, 211).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략의 관점에서 아베의 대전략이 일본의 지정학적 특징을 포함하여, 일본이 직면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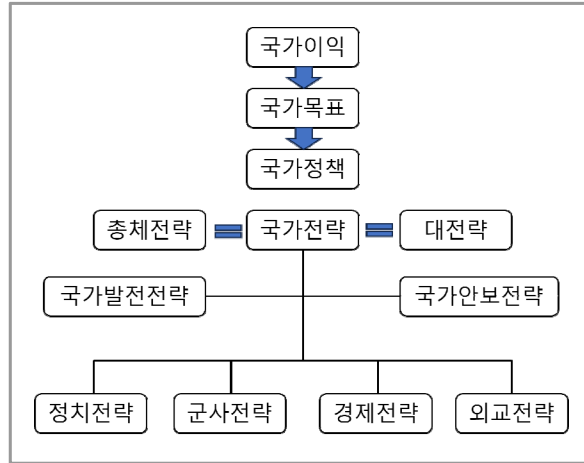
대전략(Grand Strategy)은 리들 하트(Basil Liddell Hart)가 전략의 상위 수준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용어였다. 하지만 대전략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지난 세기까지 활발하지 않았다(Liddell Hart 1991, 10). 오히려 탈냉전 이후 논의가 활발해져서,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대전략의 본질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자원을 모으는 국가의 능력을 향상하는 정책이라고 하였다(Kennedy 1991, 5). 반면 로버트 아트(Robert Art)는 대전략이란 단일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한 국가가 국제정치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Art 2003, 2). 월트(Stephen Walt)는 대전략이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원을 채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한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결정하고, 그러한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그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Walt 2005, 75-76).

미국은 탈냉전 이후 적절한 대전략을 구성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외교 정책을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대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니나 실로브(Nina Silove)는 이전 학자들이 대전략의 개념을 모호하게 정의한 것이 문제라고 평가하면서, 계획, 원칙 및 행동 유형이라는 범주로 대전략의 정의를 구성했다(Silove 2018, 27). 한편, 스티븐 로벨(Steven Lobell)은 강대국의 대전략 변화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이해관계와 국제적 환경과 국내 연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Lobell 2003, 19). 이처럼 최근 대전략 연구는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전략의 진화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대전략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Arthur F. Lykke Jr. 2001; Foster 1990, 47-48; Jablonsky 2012, 3; Yarger 2012, 45).

전략의 체계는 <그림 1>과 같이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인 국가이익에서 시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 국가 목표이다. 그리고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국가전략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의 전략이 되고, '대전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국가전략의 하위전략으로 정치, 군사, 경제, 외교, 전략문화 등의 전략이 있다(박창희 2013, 108).

이처럼 대전략이란 국가가 당면한 환경에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이익(Ends)을 이루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수단들(Means)을 다양한 방법(Ways)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전략문화, 지정학적 상황, 경제 성장단계, 그리고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대전략을 선택한다(Arthur F. Lykke Jr. 2001; Meiser 2016; Silove 2018, 31-32).

〈그림 1〉 전략의 체계와 상호관계



자료: 박창희(2013, 107).

이때 목적(Ends)은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목표이고, 방법(Ways: 전략적 개념·행동 과정)은 자원을 사용하여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수단(Means)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자원을 말한다(Yarger 2012, 49).

본 연구는 아베의 대전략을 적절한 목적이 제시되고, 수단, 방법이 선택되고 운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지정학적 상황, 직면 문제들의 해결 여부, 미래 비전 제시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첫째, 일본의 지형과 자연환경, 그리고 지정학에서 권장하는 해양세력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Fukushima 1997; Graham 2005; Watanabe 2019).

둘째, 경기침체와 저자세 외교에 대한 불만 등 이전 대전략인 요시다 노선이 탈냉전시대에 적합하지 않게 된 요인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Fukushima 1997; Graham 2005). 메이지 유신 이후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하다가, 대공황과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군국주의화하면서 대동아공영권(대륙세력 전략)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갈등하게 되었다. 패전 후 미국의 점령정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해양세력 전략인 요시다 노선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대전략의 변화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아베의 대전략이 추구하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요시다 노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김태중 2020, 209-201).

셋째, 일본과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상대적 권력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 탈냉전 이후의 경제성장, 그리고 이런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해군력 강화로

인한 일본의 위협인식 증가 등을 논의할 것이다(Liff 2015; Peng Er 2017; Pugliese, Insisa 2016; Togo 2014; Yoshihara 2014).

마지막으로 일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아베의 대전략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단들을 이용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지를 논의하면서, 아베의 대전략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지리적 환경과 지정학

1. 일본의 지리적 특징

일본은 4개의 주요 섬과 태평양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로가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으로 본토와 해로의 안전이 필수적이다(Sajima, Tachikawa 2009, 1).

모든 섬나라가 반드시 해양세력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정학은 섬나라가 경제적 번영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메이지 일본은 부국강병을 위해 해양세력 전략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코사카 마사타카(高坂正堯)는 해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을 소유하고 비공격적 외교 관계를 유지했던 13세기 베네치아와 17세기의 네덜란드와 일본을 비교하고 (Samuels 2007, 127), 영국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메이지 시대 대전략을 수립했다고 평가하였다(Graham 2005; Samuels 2007, 49).

2 지정학이 제시하는 일본의 전략

근대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번영한 국가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같은 해양세력이었다(Friedman 2001, 43). 이들은 이전 제국들과 달리 영토나 강한 육군을 추구하지 않았고, 스페인, 포르투갈과 다른 해양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가졌다. 따라서 이들이 추구한 해양세력 전략은 영국과 같이 섬나라에게 유리했지만, 대륙에 위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보 위협이 적은 네덜란드와 미국과 같은 국가들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런 해양세력은 대륙세력에 비해 안보 위협이 낮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해군력으로 안보가 확보되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데 집중하였다(Gray 1992, 4). 그리고 그 과정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전략문화가 성장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정학자인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해양세력은 해군과 경제력에 기반하지만, 지리적 위치, 영토 크기, 물리적 편안함, 국민의 성격, 정부의 성격, 그리고 국가 제도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Mahan 1987, 28-29).

그리고 이런 경제성장의 핵심인 해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제해권을 위한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해군력은 해양세력의 전략적 비전, 특히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하지만 해군은 육군과 달리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아 대체하기가 어려웠다. 그중에서 군함과 같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특히 전문 인력은 대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해양세력은 조선 산업과 그와 관련된 인력들을 중시해왔다(Friedman 2001, 42; Grygiel 2013, 18).

게다가 해양세력은 대륙세력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패권국가가 아닌 대륙세력과 연합·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그들로부터 부족한 육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해양세력은 그들 육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군의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해양세력이 대륙세력과 연합을 형성할 때 패권을 추구하는 대륙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Friedman 2001, 36, 44).

3. 아베가 직면한 국내외 환경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부국강병하고 종속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메이지 정부가 추구했던 부국강병을 넘어, 제국주의화 하면서 대륙세력 전략(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서 국력은 약화되었다(김태중 2020, 209).¹⁾

역설적으로 메이지 정부가 추구한 전략은 일본이 패전 후 요시다 노선을 통해 다시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런 요시다 노선은 국가안보를 미국에

1) 1930년 후반 육군과 해군의 남진/북진론 논쟁은 대륙세력 전략의 목적인 오타키(Autarky)라는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일어난 것이다. 남진을 주장한 해군도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하는 것에는 이미 동의한 상태였다.

의존하면서, 낮은 수준의 방위력을 유지하는 한편, 제한된 자원을 경제발전에 집중하여, 대전략의 목표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는 더 이상 이념 대결을 하지 않았고, 미국도 더 이상 안보나 시장 접근 측면에서 일본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탈냉전 이후 요시다 노선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1) 요시다 독트린과 탈냉전과의 불일치

냉전 동안 일본의 성공은 미국이 자유주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일본에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양극 체제라는 독특한 국제적 상황과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한 요시다 노선 때문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 이러한 양극 체제의 붕괴는 일본의 대외환경은 물론 일본 국내 정치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Pyle 2007, 279).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경제 호황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의 급격한 절상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거품경제가 터졌다. 가격이 크게 오른 부동산, 주식 등 실물자산이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심각한 장기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Pyle 2007, 283-286).

냉전이 종식되면서 요시다 노선의 두 축이었던 미국에 안보의존과 경제성장 집중 전략이 약화되었다. 우선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미국의 경제적 특별대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고, 1990년이후 방위분담금을 25억달러로 두배 증액하는 등 안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요시다 노선이 점차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새로운 일본 지도자들은 '상업 국가'로서의 일본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 정치 및 군사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여, 21세기에는 일본이 국제정치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걸프전(1991) 참전 압력에, 일본은 파병 대신 130억 달러 기부로 대신하면서 '수표 외교'라고 조롱받았다. 그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 보존과 세계에서 일본의 인정과 명성이라는 일본이 우선순위 상위에 두었던 목적들을 성취하기 어렵게 되자, 일본 지도자들은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었다(Pyle 2007, 16, 290-292).

(2) 경제문제

일본경제는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 붕괴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적완화만으로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였다(김규판 외 2016, 22).

일본과 독일은 3차 산업혁명 당시 제조업을 통해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현재 두 나라 모두 IT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은 대량생산과 소비를 강조했고, 공장은 정시에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문화인 반면, IT 산업은 집단문화보다는 자율·재택근무 등 자유로운 생활 방식과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이다.

그리고 해양세력 전략의 특성은 무역뿐 아니라 제조업을 통한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해양세력에 적합한 문화를 갖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인데, 일본은 1980년대 대표적인 해양산업인 조선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자 갑자기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조선 산업의 인력 수요는 줄어들고, 일본 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 졸업생들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면서, 결국 1999년 도쿄대학은 조선해양공학과를 폐지했다(김도현 2019).

해양세력들은 제해권에 의존해 국가안보와 경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자국에 맞는 첨단 군함을 생산할 수 있는 조선업체가 약화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안보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마한은 해양세력의 5가지 핵심요소를 지리적 위치, 물리적 형태, 영토의 내용, 인구의 수, 국민성, 정부의 성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중 인구의 수는 해양과 관련된 직종(조선, 어업 등)²⁾의 종사자의 수를 의미한다(Alfred Thayer Mahan, 1898, 28-29, 42-43).

그래서 미국은 존스 액트(Jones Act)와 같이 1920년에 제정된 법률(Merchant Marine Act)을 갖고 있다. 그 법률의 내용은 미국 내에서 선박수송시 운항되는 선박에 대한 운항권 제한(Cabotage)으로 미국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마찬가지로 영국도 이와 유사한 영국 해운법(Merchant Shipping Act)법이 1995년 제정되었다. 이처럼 해양세력들은 국가안보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운항권 제한을 활용하여, 조선업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3)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군력 강화

저렴한 노동력과 큰 시장을 가진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부유해지면, 중국이 그 경제력을

2) 최근에는 해양세력이라고 해서 해양산업만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5G, 양자역학, 항공, 우주관련 산업도 첨단산업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관점은 단순한 예측 이상임이 이미 입증되었다(Mearsheimer 2021, 50).

중국의 군사력은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로 늘리면서 인민 해방군의 해군과 육군을 현대화했다. 그래서 동아시아 최대의 국방예산을 보이는 중국은 2015년 일본 국방예산의 3.5배 규모를 지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일본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정환 2019, 4). 특히 중국의 미사일과 잠수함 전력은 이미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Samuels 2007, 140).

〈그림 2〉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방향



게다가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양세력에게 있어서 단순히 두 국가의 결합이 아니다. 〈그림 2〉와 같이 중국은 지리적으로 서해는 한반도가, 동중국해는 일본 열도가 방벽과 같이 막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대만 쪽이다. 그러므로 양국의 통일은 중국의 서태평양 진입로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서태평양 영향력에, 일본에게는 본토 방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게다가 대만 주변 해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해로이기 때문에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Pyle 2007, 310-311; Samuels 2007, 142; 김태중 2019, 57).

Ⅲ. 아베 대전략과 평가

1. 목적(Ends): 새로운 강대국 일본

냉전 종식 이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기침체와 정치적 무능, 사회적 불안에 시달려 왔다(Dobson 2016, 201). 이런 맥락에서 아베는 포괄적인 국내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외교·안보·정치 개혁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한 지도자로 2006년 등장하였다(Berger 2014, 2; 安倍晋三 2006). 하지만 지병을 이유로 1년 만에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2012년 재집권한 아베는 “새로운 나라로”라는 책에서 언급했듯이 강대국 일본을 목표로 하였다(安倍晋三 2013). 구체적으로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쇠퇴하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21세기에 세계 주역으로 활약하는 ‘강한 나라’였다. 둘째, 중국이나 한국 등 주변국들의 사죄나 반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주장하는 나라’였다. 셋째, 일본 내에 얽매어서 국제 문제에 무관심한 소극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제평화와 초국가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나라’였다(박철희 2021, 191).

오히려 일본의 대전략 역사를 고려할 때 메이지 유신과 요시다 노선과 같이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혁신을 통해서 장기적인 부국강병을 추구했어야 했다. 오히려 강대국이 누리는 권력이 강하고, 주장하고,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듯하다.

2. 방법(Ways): 권력 집중과 중앙 통제 강화

대전략에서 방법은 자원을 사용하여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아베 대전략의 목표인 강대국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력, 외교·안보와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전략문화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대국이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일본의 내각제는 전통적으로 안정을 중시하며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그러나 아베는 1기 집권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략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정부 관리들에 대한 ‘국가 공무원 임명권’과 정당 후보를 임명하는 당내 공천권이 포함된다. 그래서 2014년 아베 정부는 약 600명의 고위인사를 관리하는 ‘내각 인사국’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총리의 의도가 관료 임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伊東光晴 2019, 41).

비록 총리관저 주도로 관료인사를 결정하는 체제는 1997년부터 정비된 것이지만, 2014년 아베 정권의 내각 인사국 신설과 함께 '손타쿠(村度)' 정치 시대가 열렸다(清水眞人の 2016, 31, 35).

한편,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가 공천권을 주재하게 되면서 내부 파벌주의가 약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내 내부 견제와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 55년 체제 이후 자민당 주도의 정치가 부패와 편향성이 적었던 이유였던 '당내 파벌'의 약화는, 오히려 일본 정당정치를 총리의 의도로 편향되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아베 2기 정권에서는 총리가 정치와 행정 모든 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내각제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권력 집중화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 소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위험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런 권력 집중은 해양세력이 합의와 타협을 중시하는 특성에 반하는 것이다.

3. 수단(Means): 아베노믹스, 보통국가화, 민족주의

(1)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2차 아베 정권 동안 과감한 통화(양적완화)정책, 유연한 재정정책, 성장전략이라는 3가지 수단을 통해 국내 경기침체에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아베노믹스의 3가지 수단의 핵심은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정책이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2013년 3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를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했다. 이후 구로다 총재는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을 본격화하였고, 2013년 정부예산에서 경기부양 예산 10조 엔을 추가 편성하면서 유연한 재정정책을 시작하였다(岩村充 2018, 38).

두 번째 수단인 재정정책은 거품붕괴 이후 일본경제가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했지만, 저성장 경제체제 하에서 재정정책은 잠재성장률을 견인하는 성장전략이라기보다는 수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김규판 외 2016, 23).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수단인 성장전략은 전후 일본 정치·경제 모델의 구조를 개혁해 잠재적인 경제성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이정환 2019, 14).

아베노믹스는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소비 확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가계 측면에서 2017년 이후 실업률을 2~3% 안팎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임금 개선에는 실패했다. 특히 2000년 대비

1인당 GDP가 285.2% 성장한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2.9% 성장에 그쳤다. 따라서 실질임금 하락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발생하여 정책목표와 달리 가계소비 증가로 인한 기업소득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송정현 2022, 69-71).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세출 중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을 위한 국채비로 사용되는 비율은 약 1/5을 차지하고 있고, 국채 누적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여 재정 경직성이 심화하였으며, 정부 재정적자는 더욱 증대되었다(송정현 2022, 72-74; 伊東光晴 2019, 35-36; 伊藤隆敏 2018, 109; 이정환 2019, 11-12).

해양세력 전략에서 경제전략은 IT와 같은 첨단기술을 개발·발전시키고 실질 급여 증대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이었다(伊東光晴 2019, 38, 42). 그러나 일본은 7년 동안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7중고(재정팽창, 일본 주식 이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바쁜 엔저, 자원가격의 상승, 탈탄소 지옥, 교육 후진국)'에 직면하게 되었다(大崎明子 2020; 鈴木崇久 2022).

(2) 보통국가화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2013년 1월 아베 2차 내각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그래서 12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라는 가치, 그리고 강한 경제력과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경제 대국에 더해, 개방되고 안정적인 해양을 추구하는 해양국가를 제시하였다(内閣官房 2013a, 2).

그리고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관저가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 정부 기관을 감독하고 조정할 권한을 갖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2013년 12월 신설하고, 2014년 1월에는 NSC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국(NSS)도 신설하였다(Hughes 외 2021, 129-130; 신정화 2022, 50).

2015년 9월 19일에는 자위대법, 무력 공격사태대처법, 중요 영향 사퇴법, 유엔 평화 유지 활동 협력법 등 10개의 개정법안인 '안보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함께 일본 주변 지역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체제를 정비하였다(Liff 2018, 10, 13-14; 강길모 2020, 128).

① 수단으로서의 안보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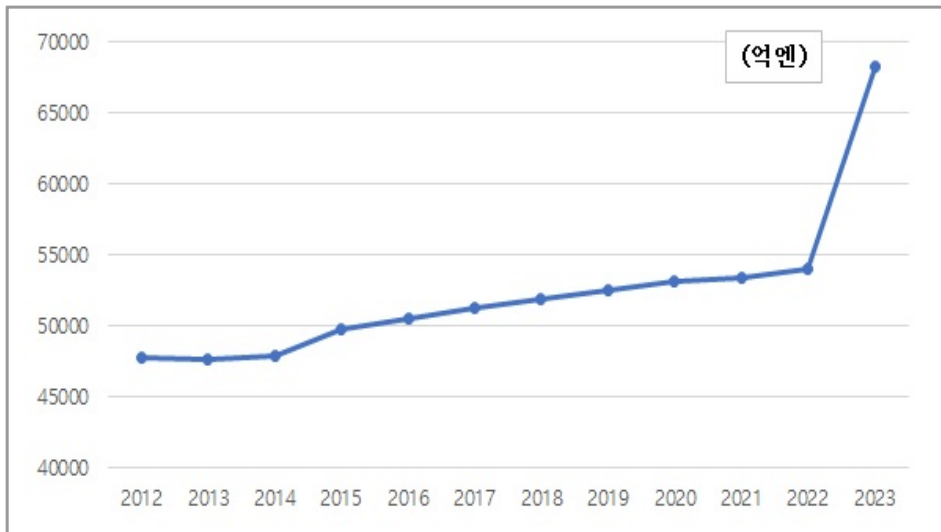
아베의 대전략에서 국가안전보장상의 전략적 접근법으로 독자적인 방위력 증대, 미일 동맹의 강화, 그리고 다각적·다층적 안보협력 추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위계획 대강 2013’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2019-2023’을 발표하였다(Hughes 외 2021, 128; 内閣官房 2013a; 内閣官房 2013b; 内閣官房 2013c).

방위계획 대강에서 일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영토·영해·영공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内閣官房 2013c, 6). 특히 해양세력인 일본은 해상으로부터 침략에 대한 국토방위와 주변 해역에서 해로 안전 확보를 강조하였다(강길모 2020, 131).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첫째, 탈냉전 이후 중국의 남서 제도와 남중국해를 통한 태평양 진출이 일본 영토와 해로 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2013년 12월 방위계획 대강에서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남서 제도 방어를 낙도방어로 명명하고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内閣官房 2013c, 12-13). 둘째,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센카쿠 제도와 남서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일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셋째, 남서 제도를 포함한 낙도방어를 위한 방위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김덕기 외 2023, 56-58).

일본은 중국의 강경한 태도와 해군력 강화에 대해서 일본의 영토와 해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과 해군력 부상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2010년대 초부터 해상자위대 임무 중심을 남서 제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배준형 2022, 16).

〈그림 3〉 일본의 방위비 추이(2012-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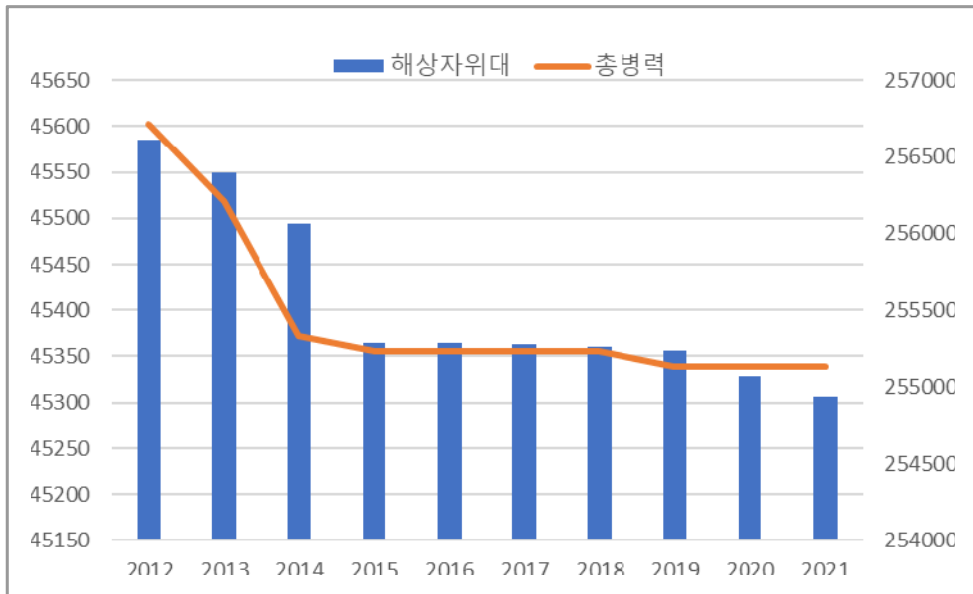


자료: 防衛省(2012-23).

아베 총리는 방위계획개강에 따라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과거 GDP의 1% 방위비 한도를 폐지하고, <그림 3>과 같이 2013년 이후 10년 연속 방위비를 늘려 2023년 방위예산은 약 6조 8천억 엔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방위비를 증대하여 2027년까지 GDP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4>와 같이 일본의 총자위대 병력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영해와 해로를 책임지는 해상자위대의 병력도 감소 추세에 있다. 해군 병력은 육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모병제인 일본에게는 치장된 군함을 운용할 예비병력도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런 병력의 감소 추세는 증가하는 중국 해군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림 4> 자위대 총병력과 해상자위대 추이



자료: 防衛省(2012-23).

② 수단으로서의 외교전략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국제협조주의를 토대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内閣官房 2013a, 3).

아베의 가치 외교는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가치관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2012년 ‘아시아·다이아몬드 안보 링크’라는 이름으로

미국, 호주, 일본, 인도 4개국 연대구상은 이후 2017년 쿼드(Quad)라는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외교적으로 2006년 아베 총리가 처음 외교적으로 공식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Free and Open Indo-Pacific)’은 재집권한 이후인 2016년 구체화하였다(박철희 2021, 195). 그리고 인·태구상은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해양국가와 대륙국가간의 대립이라는 지정학의 귀환이었으며,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인도까지 확장한 것이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및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대항 전략’이었다(신정화 2022, 55-56).

그리고 이런 일본의 구상을 받아들여, 2017년 12월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안보 전략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미·일 양국은 인·태전략을 통해 지역 내 안정과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상호역할을 분담하고자 하였다(Department of Defense 2019; 권태환 2020, 22-24; 배준형 2022, 17).

이처럼 국가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립,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안보 법안들 입법, 자위대 강화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적 역할 증대, 일본의 전략적 유대관계 확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쿼드 구상, 일본의 국제적 역할 강화 등 ‘일본 외교의 지평 확장’을 모색하면서 ‘강대국 외교’를 시작하였다(오승희 2023, 273).

하지만 강대국 일본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외교적으로 ‘주도하는 나라’를 추구하고, 많은 외교적인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쿼드의 인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아세안국가들은 더 이상 경제력이 약한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요시다 노선에서 벗어나 ‘강한 나라’를 위한 방위계획은 해양세력에게 중요한 영토와 해로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실행 단계에서는 여전히 미군에 의지하려 경향이 보인다.

(3) 수단(Means)으로서의 민족주의

요시다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평화헌법을 중시하고, 미/일 안보체제 파기를 요구하는 세력과 안보 체제는 유지하되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본내 좌우 정치세력간의 격전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두 세력 모두 요시다 노선의 핵심인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가 미국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기 때문에 민족적 자주성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따라서 아베는 고노 담화와 도쿄 재판의 재평가를 추진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대미

종속을 내재화한 요시다 노선을 파기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하였다(黃 洗姬, 2021, 299-301).

그래서 2006년 아베가 그린 일본의 미래비전은 일본의 전통적인 역사, 자연, 전통문화 등에 기반을 둔 ‘아름다운 나라’였고, 이후 2012년에는 ‘새로운 일본’이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핵심은 아베가 소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일본 회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일본 회의’는 천황제 존중과 국력의 확립, 국력 향상 등 복고적 민족주의를 통해 일본의 부활을 꾀하는 동시에, 역사와 영토 교육을 통해 일본 국민의 자존감을 확립하려는 신보수주의적 성향을 띠고 결성되었다(박철희 2021, 191).

따라서 ‘새로운 일본’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중 하나인 ‘주장하는 나라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 등 주변국의 사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였다. 게다가 아베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의 ‘새로운 역사’를 사용했으며,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과 역사 교과서 논란,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합리성, 전문성, 그리고 타협을 강조하는 해양세력 전략과 달리, 대륙세력 전략은 지위, 위계를 중시한다. 하지만 아베는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나라’를 위해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일본이 비합리적이고, 지위와 위계를 중시하는 대륙세력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하면서 대륙세력의 전략문화로 경도되면, 이념적 원칙들과 국내 정치와 같은 주관적인 시각(mental maps)들이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략적으로도 부적절한 정책 결정을 하므로 대전략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Grygiel 2006, 25).

따라서 해양세력 전략의 수단으로 (방어적)애국주의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비록 약소국은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자국의 생존과 발전에 사용하지만, 강대국은 자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민족보다 국가에 우선순위를 두는 애국주의(patriotism)는 한 민족국가의 성취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지만 다른 국가구성원과의 연대의식을 갖기 때문에 해양전략의 수단으로 적합하다. 물론 애국주의도 극단화 될 경우, 국수주의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군사적/문화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해양세력이 선호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인적 시민정신을 강조하고, 국제주의를 통해서 집단이기주의를 억제한다면 대외적으로도 우호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김명섭, 2008, 136-137, 김영명, 2002, 374).

IV. 결론

일본의 지리적 특징 중 하나는 도서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 전략을 대전략으로 채택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는 일본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그러나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냉전에 적합했던 요시다 노선은 시대에 맞지 않는 대전략이 되었다.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일본은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베 정권은 중국의 부상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등장하게 되었다. 1기 때 실패를 경험 삼아 2012년 다시 등장한 아베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나라로'라는 아베의 대전략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대전략을 추진하려는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국가 공무원 임명권을 통해 관료를 장악하고, 당내 공천권을 가지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손타쿠라는 관료의 병폐를 초래하였고, 당내 부패와 편향성을 작게 역할을 했던 기존 당내 파벌을 약화했다.

대전략을 이루는 수단 중에 하나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시행 결과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다른 수단인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일련의 계획들은 해양세력 전략에 부합하게 했지만, 외교는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적었고, 안보는 계획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부족하고, 여전히 미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보였다. 또 다른 수단이었던 전략문화는 '주장하는 국가'를 위해서 강화한 민족주의로 인해서 합리적이고, 전문가를 중시하기보다는 여전히 이념적이고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처럼 아베의 대전략은 '새로운 나라로'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이루려는 방법과 수단이 적절하지 않았다. 지정학은 일본에게 해양세력 전략을 제시했지만, 방법으로는 대륙세력 전략과 같이 권력 집중을 하였고, 수단으로 아베노믹스는 성공하지 못했다. 비록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해양세력 전략에 부합했지만, 실행과정에서 부족했다.

참고문헌

- 강길모. 2020.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따른 해양전략 분석. 한국해양정책학회지 1(1), 119-140.
- 권태환. 2020. 본의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 군사논단 100(1), 221-291.
- 김규관 · 이형근 · 김승현 외. 2016.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덕기 · 김기호. 2023. 일본의 남서(南西)제도 반격능력(反擊能力) 강화가 동북아에 주는 전략적 함의. 군사논단 113, 43-73.
- 김도현. 2019. 韓조선업의 미래. 日답습 우려: 전공자가 사라진다. 시사저널 10.10.
- 김영명. 2002. 세계화와 민족주의: 약소국 시각정립의 방법. 한국정치학회보 36(2), 367- 384.
- 김명섭. 2008. 세계시민주의의 대 애국주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18(3), 129-148.
- 김태중. 2019. 21세기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원인. 국가안보와 전략 19, 35-67.
- 김태중. 2020. 제국일본 대전략 변화의 원인. 아세아연구 63(4), 187-215.
- 박창희. 2013.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 박철희. 2021. 아베 시대의 대전환: 자민당 지배 공고화를 통해 탈전후하는 일본. 일본비평 25, 180-205.
- 배준형. 2022.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36, 5-30.
- 송정현. 202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학보 132, 63-77.
- 신정화. 2022.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동학: 요시다 시대와 아베 시대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22(4), 37-63.
- 오승희. 2023. 초불확실성 시대 일본의 게임체인저 전략: 아베 독트린. 안보 넥서스. 가치 네트워크. 일본비평 28, 268-300.
- 이정환. 2019. [미래일본 2030] 아베 이후 일본은 어디로?(1): 대내외 구조변동 요인과 일본의 대응, 1-20.
- Art, Robert. 2003. A Grand Strategy for Americ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Arthur F. Lykke Jr., 2001.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In Joseph R. Cerami · Jr, James F. Holcomb eds.,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Berger, Thomas. 2014. Abe's Perilous Patriotism: Why Japan New Nationalism Still Create Problems for the Region and the US-Japanese Alliance. Washinton, DC: CSIS.
-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 U.S. Department of Defense.
- Dobson, Hugo. 2016. Is Japan Really Back? The Abe Doctrine and Global Governanc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7(2), 199-224.
- Foster, Gregory. 1990. A Conceptu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Strategy. *The Washington Quarterly*. 13(1), 43-59.
- Friedman, Norman. 2001. *Seapower as Strategy: Navies and National Interests*.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 Fukushima, Yoriko. 1997. Japanese Geopolitics and Its Background: What Is the Real Legacy of the Past?. *Political Geography*. 16(5), 407-421.
- Graham, Euan. 2005. *Japan's Sea Lane Security, 1940-2004: A Matter of Life and Death?*. Routledge.
- Gray, Colin. 1992. *The Leverage of Sea Power: The Strategic Advantage of Navies in War*. Free Press.
- Grygiel, Jakub. 2006. *Great Powers and Geopolitical Chang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rygiel, Jakub. 2013. Geography and Seapower. In Peter Dutton · Robert Ross and Øystein Tunsjø eds., *Twenty-First Century Seapower: Cooperation and Conflict at Sea*. Routledge.
- Hughes, Christopher. 2015.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New Dynamism Or New Dead End?. Palgrave Macmillan.
- Hughes, Christopher. 2017. Japan's Strategic Trajectory and Collective Self-Defense: Essential Continuity or Radical Shift?.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43(1), 93-126.
- Hughes, Christopher, Patalano, Alessio and Ward, Robert. 2021. Japan's Grand Strategy: The Abe Era and Its Aftermath. *Survival*. 63(1), 125-160.
- Jablonsky, David. 2012. Why is Stategy Difficult?. In J. Boone Bartholomees Jr. eds.,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Strategy*. Carlisle Barracks, PA.: SSI.

- Johnston, Alastair Iain. 1998.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nnedy, Paul. 1991. *Grand Strategies in War and Peace*. Yale University Press.
- Liddell Hart, Basil. 1991. *Strategy*. Meridian.
- Liff, Adam. 2015. Japan's Defense Policy: Abe the Evolutionary. *The Washington Quarterly*. 38(2), 79-99.
- Liff, Adam. 2018. Japan's Security Policy in the Abe Era: Radical Transformation or Evolutionary Shift?.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1(3), 8-34.
- Lobell, Steven. 2003. *The Challenge of Hegemony: Grand strategy, Trade, and Domestic Politic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uttwak, Edward. 2001.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Mahan, Alfred Thayer. 1987.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Dover Publications.
- Maslow, Sebastian. 2015. A Blueprint for a Strong Japan? Abe Shinzō and Japan's Evolving Security System. *Asian Survey*. 55(4), 739-765.
- Mearsheimer, John. 2021.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100(6), 48-58.
- Meiser, Jeffrey W.. 2016. Ends+Ways+Means=(Bad) Strategy. *Parameters*. 46(4), 81-91.
- Nilsson-Wright, John · Fujiwara, Kiichi. 2015. Japan's Abe Administration Steering a Course between Pragmatism and Extremism. September.
- Peng Er, Lam. 2017. *China-Japan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Antagonism Despite Interdependency*. Palgrave Macmillan.
- Pugliese, Giulio · Insisa, Aurelio. 2016. *Sino-Japanese Power Politics: Might, Money and Minds*. Palgrave macmillan.
- Pyle, Kenneth. 2007.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Public Affairs.
- Sajima, Naoko · Tachikawa, Kyōichi. 2009. *Japanese Sea Power: A Maritime Nation's Struggle for Identity*. Sea Power Centre.
- Samuels, Richard.. 2007.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hin'ichi, Kitaoka. 2014. The turnabout of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proactive pacifism. Nippon.com. April, 2, Available: <http://www.nippon.com/en/currents/d00108>.
- Silove, Nina. 2018. Beyond the Buzzword: The Three Meanings of Grand Strategy. Security Studies. 27(1), 1-31.
- Togo, Kazuhiko. 2014. Japan-China-US Relations and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Perspectives from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sian Perspective. 38(2), 241-261.
- Walt, Stephen. 2005. In the National Interest: A New Grand Strategy for American Foreign Policy. Boston Review. 30(1), 6-12.
- Watanabe, Atsuko. 2019. Japanese Geopolitics and the Western Imagination. Palgrave Macmillan.
- Yarger, H. Richard. 2012. Toward a Theory of Strategy: Art Lykke and The U.S. Army War College Starategy Model. In J. Boone Bartholomees Jr. eds.,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National Security Issues, Vol I: Theory of War and Strategy. Carlisle, U.S. Army War College.
- Yoshihara, Toshi. 2014. Japanese Hard Power: Rising to the Challeng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ugust.

- 内閣官房. 2013a.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 内閣官房. 2013b.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26年度~平成30年度)について.
- 内閣官房. 2013c. 平成26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 大崎明子. 2020. アベノミクス失敗の本質と新政権がすべきこと. 東洋経済 9.11.
- 鈴木崇久. 2022. 日本を見捨て始めた富裕層, 没落ニッポンを襲う 七重苦. 週刊ダイヤモンド 1.11.
- 防衛省(2012-23). 我が国の防衛と予算. 防衛省.
- 安倍晋三. 2006. 美しい国へ. 文藝春秋.
- 安倍晋三. 2013. 新しい国へ: 美しい国へ完全版. 文藝春秋.
- 岩村充. 2018. 異次元緩和を修正するのは今だ「永久国債」で出口を探れ. 中央公論 10月.
- 伊東光晴. 2019. アベノミクス病理の淵源一五つの特徴. 世界 5月.
- 伊藤隆敏. 2018. 現在の成果の源流は第1次政権にあり. 中央公論 5月.

- 清水真人・牧原出・松井孝治. 2016. 責任から逃げる大臣, 独走する官邸官僚: 官を酷使する政治主導の歪み, 中央公論 6月.
- 黄 洗姫. 2021. 安倍政権のレガシー政治と日本外交の現実主義.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94(2), 297-315.

● 투고일: 2023.12.30. ● 심사일: 2024.02.05. ● 게재확정일: 2024.02.14.

| Abstract |

Japan's Geopolitics and Abe's Grand Strategy: Compatibility with Maritime power strategy

Kim TaeJung (Researcher, Peace & Democracy Institute)

During the Cold War, Yoshida's goal of becoming an economic powerhouse was achieved, but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it became unsuitable for the times. Afterwards, due to domestic problems, Japan was unable to establish a new grand strategy. However, as the threat from China grows, Abe's Grand strategy could be formulated.

In order to evaluate Abe's Grand strategy, we first want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Yoshida Line and analyze the strategy of sea power recommended by geopolitics to Japan. And I tried to evaluate whether the ends, ways, and means of Abe's Grand strategy are suitable for the geopolitics.

Japan's history and geopolitics show that a Sea Power strategy suits Japan. However, Abe's grand strategy set the goal of making Japan a powerful country again, but the methods and means of achieving that goal did not match the Sea Power strategy. Abe's grand strategy concentrated political power as a method, and Abenomics and nationalism as a means were close to the Land Power strategy. Therefore, I would like to argue that Abe's grand strategy is unlikely to succeed because it is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direction suggested by geopolitics.

〈Key words〉 Abe's Grand strategy, Abenomics, Grand strategy, Geopolitics,
Sea Power strategy